

읽어보라KU ⑤ 기후위기

‘읽어보라KU’는 학부생이 관심 가질만한 논문을 선별·요약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교훈과 전망

코로나19, 기후위기 해결의 전환점이 되다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처럼 해야
봉쇄조치·이동 제한, 환경에 도움
생태계 고려한 접근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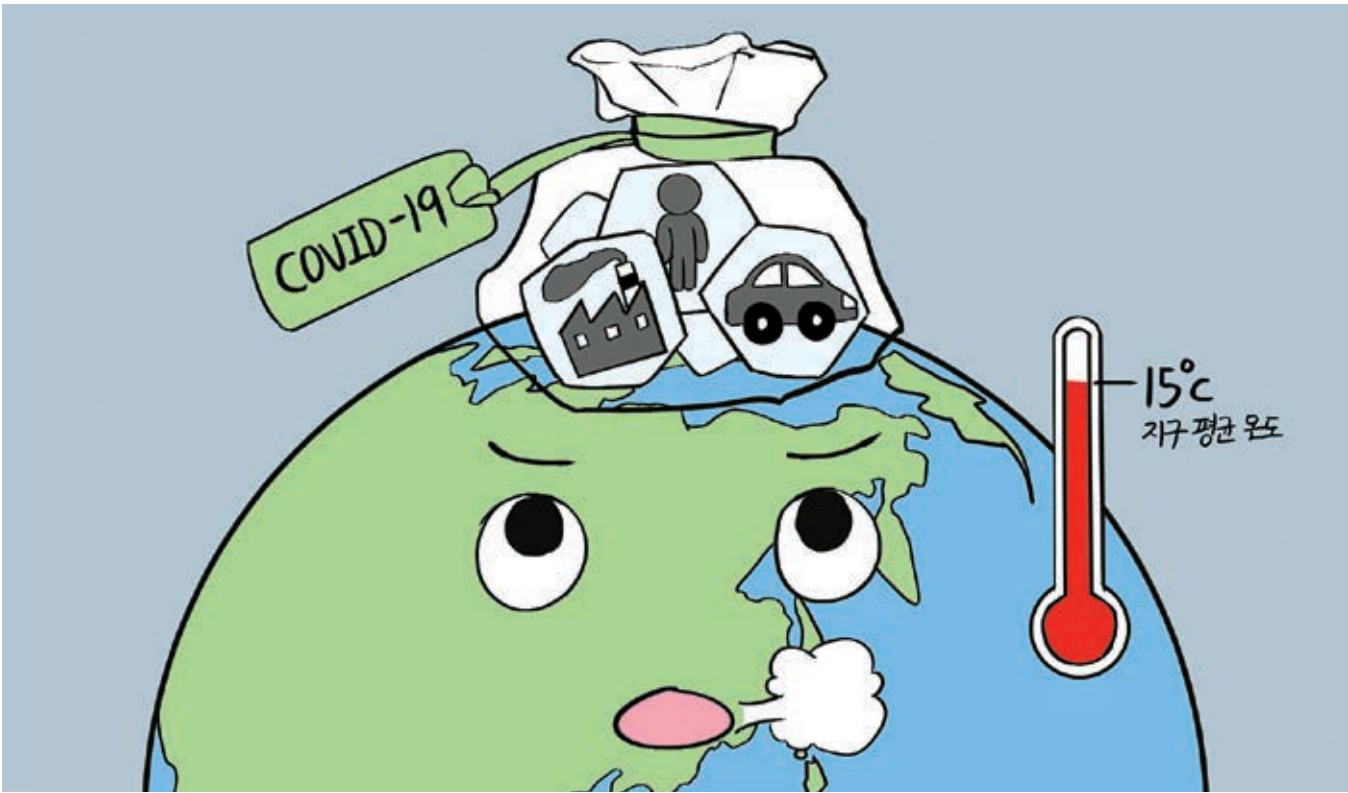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이 근원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된다. 코로나19의 주범은 박쥐로 알려졌다지만, 박쥐의 병원균이 인간에게 옮겨 온 근본적인 원인은 야생동물 서식처가 파괴되며 인간과 야생동물, 가축 간의 접촉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산림파괴, 육식 소비 등 코로나19를 일으킨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이 불러올 파국적인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들의 실천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마리를 남겼다. 봉쇄조치와 이동 제한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도 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교훈과 전망(2020.8.)’**을 통해 코로나19가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로 거듭날 가능성을 살폈다.

위기 양상 비슷해도 대응은 달라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국경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위해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안이 줄어들고, 해결에 실패할 가능성도 커진다. 불평등 담론도 양쪽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빈곤층,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고소득층과 선진국이 크지만, 피해는 취약계층과 저개발국에 집중된다.

위기 양상은 비슷해도 세계의 대응은 달랐다. 코로나19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유례



없이 전면적인 통제를 취했다. ‘코로나19 공동 성명’ 등 국제 공조도 이뤄졌다. 시민들은 개인행동을 제약하며 정부 조치를 수용했다. 코로나19는 단시간에 발생해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구체적인 실천이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다. 반면 기후위기는 온실가스가 과거부터 축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된 문제다. 현재까지 비교적 안이한 대응이 이어졌다. 일부 국가의 탄소 배출 순제로(net-zero) 선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간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수용도도 낮다.

코로나19, 기후위기에 긍정적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사업장 운영 중단과 이동 제한으로 화석연료 수요가 급감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기존 화석에너지 투자가 좌초자산으로 인식되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저탄소 투자가 증가했다. 2020년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5.6% 줄었다. 코로나19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일상으로 자리잡았을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봉쇄조치 및 이동 제한으로 교통량과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이 줄어들면서 대기오염도 크게 개선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 이동 제한 조치 초기 2주 동안 27개 주요 국가에서 이산화질소 농도는 29%, 오존 농도는 11%, 미세먼지 농도는 9% 감소했다. 감염자와의 접촉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대

신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는 2020년 2~3월 이용률이 전년 대비 66.8% 증가했다.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 이용률은 각각 20.46%, 93.33%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는 상황은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로 경로를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투자를 탄소 감축과 연계하는 그린뉴딜이 그 사례다. 그린뉴딜은 화석에너지 기술에서 청정에너지 기술로 전환하며 탈탄소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2008-2009 경제위기 당시 녹색정책이 시행됐으나 정책 목표와 실행의 간극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환경규제 완화, 4대강 사업, 석탄발전 확대 등 녹색과 성장이 상충하는 모순된 정책으로 신뢰를 잃었다.

유튜브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방향모색

심각성 강조는 ‘기후위기’, 시민참여 유도는 ‘지구온난화’

의도에 따라 용어 다르게 사용해야
‘기후위기’, 언론·방송이 주로 언급
원인·방법에 집중한 ‘지구온난화’

기후 문제가 전 세계적 위기로 조명되며 대중에 노출되는 빈도도 늘었다. 이런 기후 문제를 가리켜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용어들이 함께 쓰인다. 이 중 ‘기후위기’ 사용에 대한 견해는 상이하다. ‘기후위기’가 다른 용어에 비해 기후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더 좋다는 의견,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용어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임연수(홍익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유튜브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방향모색(2021.09)’을 통해 ‘기후위기’라는 용어의 사용이 관련 공공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했다. 선행 연구는 대체로 서구 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기후 문제 관련 용어들을 살폈다.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정보 검색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관련 용어들이 지닌 사회적 담론의 내용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기후 문제를 지칭하는 각 용어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용어별로 콘텐츠 게시자 분포 달라

‘기후변화’ 관련 주요 콘텐츠 게시자는 언론 및 방송 매체, 개인방송,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후위기’는 언론 및 방송 매체가 가장 중심적인 게시 주체였고, 정부와 환경운동 시민단체도 주요 주체로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주요 주체는 개인방송과 언론 및 방송 매체였다.

모든 용어에서 공통적인 주요 게시 주체는 언론 및 방송 매체였지만, 그 영향은 용어별로 차이가 있었다. ‘기후위기’ 관련 유튜브 콘텐츠는 언론 및 방송 매체가 다른 주

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기후변화’는 여러 주체가 섞여 있고,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선 오히려 개인방송이 언론 및 방송 매체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기후위기’ 관련 채널 연결망에서는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적은 편이었다. 정부 및 환경운동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기후위기’ 관련 유튜브 콘텐츠에서 다른 용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고·원인 규명, 다양한 담론 등장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콘텐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재도 달라졌다. ‘기후변화’를 사용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기후 문제에 대한 위기 상황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다뤘다. ‘기후위기’ 관련 콘텐츠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시대

적 상황을 강조하고 에너지 정책 마련과 비상 행동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지구온난화’ 관련 콘텐츠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과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환경 문제를 주로 다뤘다.

용어별 분석 결과, ‘기후변화’ 관련 주요 담론의 구조적 특성이 다른 용어들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주요 내용이 다른 용어들에서 다루고 있는 담론들과 연관됐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두 용어에서 다루는 담론의 주요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콘텐츠에서 ‘미래 경고’가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었지만 차이점도 존재했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관련 유튜브 콘텐츠는 공통으로 ‘탄소/재해’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반면 ‘지구온난화’ 관련 콘텐츠의 중심 주제는 ‘원인/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지구온난화’를 제외한 다른 용어에서는 ‘원인/방법’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기후위기’ 관련 유튜브 콘텐츠는 ‘원인/방법’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관련 주제와도 거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계별로 용어 달라져야

분석 결과, ‘기후위기’ 관련 담론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이끄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런 ‘기후위기’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주요 주체는 언론과 방송 매체로, 다른 용어들에 비해서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언론과 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적 의제 설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후 문제에 대한 의제 설정 과정에서 국가 주도적 공공커뮤니케이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 문제가 공적 의제로 설정된 후에는 공중을 형성하고 공중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공공커뮤니케이션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적 의제가 설정된 후에도 국가 주도적 의사결정만을 강요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속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용어 사용은 적합하지 않은데, ‘기후위기’ 관련 담론은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그 심각성을 일깨우는 내용만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방안 마련과 관련된 콘텐츠는 배제됐다.

반면 ‘지구온난화’ 관련 담론에선 기후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관련 콘텐츠의 주요 게시 주체는 개인방송이었으며, 언론 및 방송 매체보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구온난화’ 관련 담론의 특성은 공중을 형성하고 다양한 실천적 대안들을 논의하는 속의 과정에 적합해 보인다.

요약 | 김민선 기자 sun@일러스트 | 조은결 전문기자